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오성(鰲城)과 한음(漢陰)'으로 널리 알려진 오성 이항복(李恒福)이 재상으로 있을 때 높은 관리들이 찾아오면 단정히 앉아서 절을 받았다. 재상은 조정에서 제일 높은 직위이기 때문이다.

것이다. 어렸을 때의 선생도 선생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선생을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후일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을 것이다.

이항복도 훌륭하지만 그의 스승 또한

무릎 꿇은 선생님

못지않게 훌륭하다. 아마 훌륭한 인품을 지닌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항복과 같은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훈장은 어릴 때 글을 가르쳤던 아이가 재상이 된 것을 보는 것만으로 더없이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재상이 된 후에도 오만하지 않고 옛 스승을 모실 줄 아는 제자를 보고는 선생으로서의 보람을 만끽했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또 바라겠는가, 비단과 쌀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는데.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들은 우물쭈물한다. 작년 스승의 날에는 경찰이 어

는 학교 교무실을 급습해서 교사의 책상 서랍을 뒤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스승의 날에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급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70%가 휴업을 했다고 한다.

존경할만한 선생을 모실 수 있고 사랑스런 제자를 둘 수 있는 행복이야말로 교육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일 것인데, 훈훈한 사제간의 정이 실종된 작금의 현실이 서글프기 짝이 없다.

지난 18일 충북 청주의 어느 학교에서

제한된 시간에 3교대로 급식을 마쳐야 하는 급식 환경 때문에 취한 조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밥을 빨리 먹으라고 강요해서 아이들이 설사와 구토를 일으켰다"는 학부모들의 말도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교사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가?

이 나라에 교육이 실종된 지 오래다. 수업시간에 잠나치고 떠드는 학생에게 꾸중만 해도 학부모들이 불려와 항의를 한다 고 한다. 아이의 기를 죽인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저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공동생활에서 규율을 어기거나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은 교사가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사의 임무이고 학부모는 교사를 믿고 자식을 맡겨야 한다. 아마 이항복도 어린 시절 글을 배우면서 선생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제발 앞으로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막강한 힘을 좀 더 건설적인 일에 발휘해주기 바란다.

<성균관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朴대표 테러사건 국민理性 되찾는 계기삼자

아만적 테러를 당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병실에서 침착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 박대표는 의료진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가 하면 주변에 대해 이번 사건을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니 참으로 공인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 각 부문과 이해집단이 저마다 소리쳐서 자기주장을 잠시 접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이후 우리사회는 진보진영 대 보수진영, 성장론자 대 배후론자, 세계화 지지자 대 민족주의자, 개발론자 대 환경론자들이 쪼다 들고 일어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로 국력을 낭비해 왔다. 그 대립은 공격적이다 못해 광기와 증오에 휩싸이기 일수였으며 정부는 이를 통합하기보다는 편을 갈라 그중 한편의 지지를 사는데 급급했다.

박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같이 증오에 찬 사회공포 속에서 터졌으며 이는 또

다른 보복이나 집단테러로 발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노사모 출신의 전 청와대 여성 비서관이 테러사건 직후 박대표를 비아냥 거리는 글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사회 지식계급의 교양수준이라면 대중의 극단적 감정은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는 셈 아닌가.

이래선 안된다. 우리가 오로지 국민소득 증가만을 노리는 천박한 국민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인식하는 문화민족이고자 한다면 야만을 경멸하고 문명과 이성을 추구하는 성숙함도 갖춰야 한다. 테러의 직접 피해자 대 민족주의자, 개발론자 대 환경론자들이 쪼다 들고 일어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로 국력을 낭비해 왔다. 그 대립은 공격적이다 못해 광기와 증오에 휩싸이기 일수였으며 정부는 이를 통합하기보다는 편을 갈라 그중 한편의 지지를 사는데 급급했다.

지금 우리에게서 총체적 경제위기와 함께 북핵문제와 한미·한일관계등 정치를 바짝 차리지 않으면 후대를 불행하게 할 난제가 쌓여있다. 내부의 증오를 녹이지 않고는 우리는 공멸한다.

설비투자 10분의 1로 감소, 기업탐만 활건가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1~2005년 기업투자 증가율은 연 평균 1.1%에 그쳤다. 10년전인 1991~1996년의 연 평균 11.1%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설비투자부진은 성장을 저하로 연결되고 총체적 경기회퇴로 이어지는 만큼 예사로 넘길일이 아니다.

재경부는 ▲중국과의 경쟁 격화가 빛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위험회피 경향이 커지고 경영행태가 보수화된 점 등을 투자부진 이유로 꼽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주변국과의 경쟁 격화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기업 때문에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이 더 심화되는 반기업 정서확산이나 불확실한 경제정책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

근들어 기업 패러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체 524개사가 기업내부에 쌓아둔 돈이 자본금의 5배를 넘어선지 오래다. 일부 대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인수·합병(M&A)에 노획되면서 경영권 방어 위한 기업들의 현금선호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투자는 꺼리면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가 살아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불황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저성장은 물론 청년실업도 투자를 늘려야 해결이 가능하다. 혼자자돈자가 일본 탈출 30년만에 일본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세계해택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노력이 한 몫을 했다. 각종 규제 완화 등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최익주

5·3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각 후보들의 농정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7일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들 중 농업관련 인사들도 전국적으로 1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모두 선전을 기대한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시장·군수 등 지역단체장과 해당 의회 의원 등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을 책임질 살림꾼들을 뽑는 만큼 얼마나 유능한 인물이 선출되는가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

특히 안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업계로서는 무엇보다 농업·농촌에 대

립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가 지역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 만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정공약과 농촌회생 대책이 초미의 현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농업계 안락의 주장이다.

지방자치 10여년을 돌아볼 때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구성원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곳은 크게 발전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개발정책 등의 남발로 오히려 지역농업을 크게 후퇴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어렵게 이뤄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착은 물론 피폐한 농업·농촌을 되살리

농업·농촌을 살릴 확실한 일꾼을 뽑자

한 깊은 애정과 사람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약 아래 열정적으로 이를 실천해 줄(綱) 농업계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 각 후보자들은 농심을 좇아 DDA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농가소득 증대와 부채문제 해결 등 큰 과제물 외에도 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특색을 살리는 지방농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나름대로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여야 5당이 내놓은 농정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현재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재탕'에 불과하다.

더욱이 예산조치가 빠져 있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농업계 안락의 우려다.

물론 농업·농촌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많고 지자체별로도 특수한 사정이나 재정자

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책임질 확실한 일꾼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입증해준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5·31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혈연이나 지연·학연을 떠나 농업·농촌을 살릴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머칠 남지않은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 실현가능한 지역농업 육성대책,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공약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따져봐야 한다.

농업인들이 5·31 지방선거에 기권하지 말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할 때 빈 사상에 놓인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책이 가시화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주춧돌을 쌓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농협장성군지부 지도·경제차장>

정부 공공근로 취로사업 영농철 피했으면

농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일손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기계화 영농·하우스 재배 등으로 본격 영농철이 따로 없지만 농촌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군인·공무원·학생 등의 일손 돕기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영세민 생계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형 취로사업이 시기적으로 농사일과 겹쳐 일손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반면

농사일에는 비산 일당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공공근로사업에는 도로·하천시설물 정비사업·복지조성·농업기반조성·국도공원화사업 등에 국한되고 농작물 지원부문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농가의 만성적 일손 부족을 해결할 묘안을 강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키거나 가급적 본격적 영농철을 피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정오·광주시 광산구 신기동



인도왕뱀의 하루 같은 일년

일년을 하루처럼 사는 동물이 있다. 바로 동물원의 인도왕뱀(비단구렁이)이다. 길이만 4m가 넘는 '괴물' 수준이다. 하지만 워낙 움직임이 없어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이 싫은 걸까. 동물원에서 10m남짓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자그마치 석 달 이상이 걸린다.

그나마 길게 누워있을 때만 '어, 움직였네'라고 생각이 든다.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고, 제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하면 또 아리튼 채 몇 달씩 있을 때가 많

다. 오죽하면 사람의 하루 움직임이 이 녀석 일년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까.

사육사가 들어가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차가운 눈만 멀뚱거리가 것이 전부다. 식사는 한달에 한번쯤. 산 닭 1~2마리다.

꼬박 한달이 걸려야 소화를 시킨다. 그나마 계절을 타는지 가을·겨울에는



잘 먹지도 않는다. 아무튼 이 뱀을 보면 다른 뱀과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 가끔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빛 도는 몸체를 보면서 '저 뱀은 참 군자처럼 품위 있게 세상을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투표용지마다 한 곳에만 기표를

제 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섯 종류의 투표 용지에 후보자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어 투표권자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5·31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투표용지 3매·광역단체장 및 광의원선거 투표용지 3매 등 총 여섯 장의 투표용지를 두차례에 나눠받게 된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가 두명이면 세명이 나 네명이면 꼭 한사람에게만 기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의 정당만을 골라 기표해야 한다. 의원 정수만큼 기표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인주가 따로 없는 내장형 기표용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습삼아 투표 용지 여백에 기표를 했다가 자칫 자신의 투표지가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용지가 훼손되면 재교부하지 않는다.

5·31 지방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투표 당일 먼저 투표를 마치고 다음 일을 보게 순서다. 선거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배려다.

▲김양호·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인간이 도박에 빠지는 것은 결국 결과의 의외성때문이다. 포커나 고스톱 등 도박이 오직 실력만으로 좌우된다면, 명확한 우열이 드러나는데 누가 깨어났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실력의 비중에 큰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틀리지만은 않다.

스포츠 중에서는 축구가 의외성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공은 둥글고 축구는 인간의 신체중 가장 부정확한 발로 하는 경기라는 표현이 있다. 결과를 읽사리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수가 많고 따라서 어느 운동경기보다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축구에서 가장 부정확한 기술중의 하나는 슈팅이다. 완장형 골키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습삼아 골키퍼가 없다면 기표를 했다가 자칫 자신의 투표지가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용지가 훼손되면 재교부하지 않는다.

5·31 지방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투표 당일 먼저 투표를 마치고 다음 일을 보게 순서다. 선거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배려다.

▲김양호·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영 파크(박주영), 슈! 슈트!" 슈트파의 의외성때문이다. 포커나 고스톱 등 도박이 오직 실력만으로 좌우된다면, 명확한 우열이 드러나는데 누가 깨어났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실력의 비중에 큰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틀리지만은 않다.

스포츠 중에서는 축구가 의외성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공은 둥글고 축구는 인간의 신체중 가장 부정확한 발로 하는 경기라는 표현이 있다. 결과를 읽사리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수가 많고 따라서 어느 운동경기보다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축구에서 가장 부정확한 기술중의 하나는 슈팅이다. 완장형 골키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습삼아 골키퍼가 없다면 기표를 했다가 자칫 자신의 투표지가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용지가 훼손되면 재교부하지 않는다.

5·31 지방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투표 당일 먼저 투표를 마치고 다음 일을 보게 순서다. 선거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배려다.

▲김양호·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슈트를 달랑해 하는, 미드필드 전방에서 시도하는 과감한 중거리슈트를 자주 시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앙골라의 한 은행은 아예 대표 선수들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한 골당 5천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다. 지난 30년간 내전에 시달려온 앙골라는 200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 선이니가 5천달러는 엄청난 돈이다. 승부는 정확한 슈트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축구황제 펠레도 '슈트는 마치 막 패스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는 듯 슈트는 그야말로 축구의 전부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체부장 kihh@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 119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총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육 팀 2200-663 디 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사회 2부 2200-62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